

한중수교 당시 국내 인식에 관한 연구: 1980-1990년대 국내 언론의 사실과 삽화 분석을 중심으로

장영태* 양철**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중수교에 관한 인식의 맥락 분석 |
| II. 한중수교의 역사적 연혁 | V. 결론 |
| III. 한중수교 당시의 사회인식 | |

| 논문요약 |

한중 간의 수교가 체결된 지 25년에 즈음하여 체결 당시의 역사적 기억은 체결회담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대의 사회가 한중수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억의 공간을 한층 다양하게 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간에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당대의 선언문과 성명문 그리고 칼럼을 포함한 사실 및 삽화 일체를 분석한다. 선언문과 성명문 등 공식 문건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로, 사실 및 삽화 등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본 연구가 삽화 등의 시각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삼은 이유는 시각 매체의 특성상 선언문과 성명문 그리고 사실 등의 언어 매체가 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는 동시에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대변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중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양국관계를 재조망하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세에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기본인식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한중관계의 착시 현상’에 관한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수교 체결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한중수교, 한중관계, 기본인식, 삽화, 사설

I. 서론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하였고, 이에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체코, 폴란드, 유고, 소련 등과 연이어 수교를 체결하였다. 냉전의 분위기가 차츰 완화되는 추세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수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강화시켰고, 한중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관계가 단절된 지 약 반세기 만인 1992년에 공식적인 수교관계를 체결했다. 한중수교는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공식적인 수교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양국에 적지 않은 진통과 부침을 주기도 하였다. 한중수교는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사건을 경험한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의 수교만큼 원활하게 해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만과의 국교 문제 및 1차 북핵 위기,¹⁾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표명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고,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지속,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대만 고립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즉, 양국은 한중수교라는 거대한 국면의 전환을 맞이하기에 앞서 해결해야만 하는 쉽지

1) 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미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관련 내용은 김홍규(2007, 27)의 논의 참고.

않은 사건들이 산적해 있었다. 국내의 여론 또한 한국전쟁의 잔상에 기인하여 중국에 대해 여전히 부정일변도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비록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냉전구도의 와해 분위기 속에서 1983년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1985년 중국 해군 어뢰정 사건에 대한 처리, 그리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체육교류 행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들이 한중수교라는 거대한 국면의 전환을 불러오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한국 기업이 1980년대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다소 간의 사건이 양국 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교 국면으로의 진입은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당시의 대중국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또한 다소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수교 체결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체결 이전에 발생한 양국 간의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살펴봄으로써 한중수교에 관한 기본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한중관계의 착시 현상’에 관한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수교 이후 25년 동안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은 일부 사안들로 인해 관계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왔으나 어느 국가들보다 급격하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라고 평가되던 양국관계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계기로 냉각기를 맞이하였고, 한국 내에서는 한중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양국관계를 재조망하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관계의 취약성, 이로 인한 착시 현상 등이 발생한 원인이 한중 수교 당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와 함께 수교 체결 당시의 상황이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상황에서, 다른 매개체를 통해 수교 당시의 한국 사회가 한중 수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억의 공간을 한층 다양하게 구성하고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한중수교와 관련한 선언문과 성명, 공식석상에서의 담화, 그리고 수교체결 당시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과 비망록, 인터뷰 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당대의 신문 및

잡지에 게재된 사설과 기사 그리고 삽화 등을 통해 이들이 담고 있는 한중수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당시의 국민들이 중국과의 수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망해 봄으로써, 한중수교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끌었던 사건들을 재구성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설과 기사, 특히 만평과 시사만화 등의 삽화에 대해 학술적 논문이나 기타 단행본들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윤비 2012, 1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삽화 등의 상징 매체를 통한 소통체계는 언어 기반의 소통체계보다 당대의 시대상 및 사회적 인식에 관한 공통적 합의가 그 기저에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바(Luhmann 1979, 48-58),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함으로써 특정 사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평 및 시사만화 등의 삽화는 사설이나 기사가 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중수교와 관련한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 발생한 1983년과 중국 어뢰정 사건이 발생한 1985년 그리고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에 발행된 신문과 잡지의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각 사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평 및 시사만화 등의 삽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적실하게 담았다고 평가되는 『조선일보』의 <고바우 영감>, 『동아일보』의 <나대로 선생>, 『경향신문』의 <청개구리>, 『한겨레신문』의 <미주알 씨>, 『매일경제』의 <풍생원>, <재치夫人>을 주로 인용했는데, 이들 삽화는 본 연구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의 맥락을 부연하는 데 이용하였다.

II. 한중수교의 역사적 연혁

한중수교라는 양국 간의 거대한 국면의 전환은 국제정세의 변화, 양국

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총화, 한반도 정세의 완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수교에 즈음하여 나타났던 냉전구도의 완화와 함께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 정세가 급격히 전환되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톈안먼 사태(1989)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립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회의에 참여할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미 동년 1월 최초의 공식접촉채널인 무역대표부를 개설한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윤해중 2012, 98).

1991년 이전에도 한국과 중국은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1983)과 중국 어뢰정 불시착 사건(1985)에 관한 처리 문제로부터 예기치 않은 정부 고위급 관료 간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색된 한반도 정세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교국면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동년 말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부터 남북은 화해국면에 진입했고, 이로부터 한중 양국은 한중수교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중 간 공식접촉사건과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을 축으로 하여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1983), 중국 어뢰정 불시착 사건(1985),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 및 상호 교환(1990),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 등 한중수교의 동인으로 작용한 사건들이 한중수교, 나아가 한중수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중 간 공식 접촉

한국전쟁 이후 한중 간에 공식적인 접촉은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1985년 중국 어뢰정 표류 사건 등 예기치 않은 두 번의 사건으로부터 이뤄졌다. 먼저, 1983년 5월 5일에 발생한 중국 국적 민항기의 불시

착 사건은 당시 중국 측 선투(沈圖) 중국민용항공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한국 측 당시 공로명 외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협상을 한 사건이다(윤해중 2012, 25). 당시 사건은 단순 항공기 고장에 의한 비상착륙이 아닌 승객과 승무원 105명을 태운 항공기가 공중에서 납치되어 한국 영공에 들어온 사건으로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양국 간 교섭의 핵심은 납치범 6명의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측은 승객과 여객기 기체는 물론 납치범까지 모두 인도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담은 담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다. 3일간 진행된 협상은 납치범들의 즉각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 발생하고 2년 후, 양국은 또 한 번의 예기치 않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는 1985년 3월 22일 중국 해군 소속의 어뢰정 3213호가 선상 반란으로부터 표류해 온 사건으로, 당시 중국 해군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군사적 충돌의 위험 직전까지 간 사건이었다(『연합뉴스』 2012/02/27). 당시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이를 미리 예상하여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사고 어뢰정의 구조 요청을 해 줌으로써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되었다. 위의 두 사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두 번의 사건으로부터 냉랭하던 한중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을 놓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한중 간 공식접촉이 단발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을 뿐, 상시적인 대화채널의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교류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간 최초의 공식접촉채널인 무역대표부가 교환 및 개설되었다. 무역대표부 개설에 관한 논의는 1990년 당시 선경 그룹의 이순석 사장이 국제우호연락회의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에서 텐지윈(田紀雲) 부총리와 면담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윤해중 2012, 90). 이후 11월부터 당시

정상기 서기관과 김일두 서기관 그리고 이현규 외신관이 베이징에서 창설 작업을 실시했고, 91년 1월 27일 한국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로, 중국은 중국국제상회(CCOIC)를 명의로 하여 무역대표부를 개설 및 상호 교환함으로써 관계가 단절된 이후 양국 간 최초의 공식적인 접촉채널이 만들어졌다(이상옥 2002, 126-127). 다만 당시의 무역대표부는 경제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었던 바, 외교 및 국방과 관련한 정치적인 업무는 양자 간 직접협의를 불가했다. 이에 당시의 무역대표부는 관계 단절 이후 최초의 공식접촉채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기능이 경제적 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던 바,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

‘7·7선언’은 1988년 당시 한국이 당면하고 있던 국제 정세 및 남북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86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제1서기가 신사고(新思考)를 주장하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박찬봉 2008, 342), 1989년에는 중소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냉전구도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 또한 88년 서울올림픽에 양 진영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남북 간 대화는 1970년대 초 세계적 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1972년 ‘7·4공동성명’의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7·4공동성명’은 남북 간 대화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양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전개했을 뿐 공동성명 그 자체가 큰 효용성을 갖지는 못했다. 이후 1984년 북한이 대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식량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양국은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예술 공연 단 교환 등을 추진하며 그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경향신문』 1984/1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채널의 구축과 그 실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7선언’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

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개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상호 교류와 해외동포들의 남북 자유왕래 문화개방, ②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적극 지원, ③ 남북 간 교역의 문화 개방 및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과 북한과의 교역 불반대, ⑤ 남북 간의 경쟁·대결외교 종결,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상호 협력, ⑥ 북한과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 개선 협조, 우리는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추구(문화공보부 1988, 492)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

당시의 '7·7선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두 가지 의의를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써,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고, 상호 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북한관에 대해 일대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는 '7·7선언'을 통해 한국은 남북관계를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민족공동체 내의 특수관계로 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전환'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견디다 못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의 내부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이 도와줌으로써,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통일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토통일원 1989, 693-701).

나아가 이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 핵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두고 남북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한 논쟁을 펼쳐왔지만, 한국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표명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부터 북한의 유엔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1991년 9월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를 통해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남북한은 그간 벌여왔던

정통성 및 합법성에 관한 논쟁에 중지부를 찍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수교 체결 이전에 발생한 양국 간의 몇몇의 사건들과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은 한중수교 체결이라는 거대한 국면의 전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한중수교라는 거대한 국면의 전환을 불러온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첫째, 1980년대 초반 양국 간에 예상치 못한 두 번의 사건을 통해 고위급 관료 간의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처리에만 집중하며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무역대표부 개설을 통해 양국 간 최초의 공식접촉채널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는 단절되어 있던 바, 수교체결 논의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 또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남북한 간의 의지에 기인한 바, 한중 간의 수교 체결을 위해 남북이 화해분위기를 조성한 것인지 혹은 남북이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 한중 간에 수교가 체결된 것인지에 대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종합하자면 한중수교 체결 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이 양국관계 개선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교 체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한중 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성명과 주요 언론 매체의 기사, 사설, 삽화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보다 세밀하게 조망해 봄으로써, 한중 간의 수교 체결을 이끈 직접적인 동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한중관계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중수교 당시의 사회인식

한중수교 당일인 1992년 8월 24일 『매일경제』에 게재된 “韓中수교와 兩

國경제” 제하의 기사는 “韓中수교는 현 정부가 全方位 외교 및 적극적 북방진출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가장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필연의 사실이라고 생각은 되었으나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그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매일경제』 1992/08/24)라고 시작한다. 이 기사에는 당시 한중수교에 관한 당대의 긍정적 인식이 집약되어 있다. 즉, 한중수교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북방정책의 최대 성과였으며, 한중수교과정을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다방면의 외교활동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이 기사의 전문에는 한중수교의 과정에서 양국 간에 발생한 단지 몇몇 사건들이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관점에서 한중수교는 당시 일본의 부상에 대한 중국의 견제심리와 더불어 북한 요인에 대한 한국의 억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양국 간 생산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역 급증의 추세가 맞물리면서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는 그간 해결하지 못한 외교안보적인 사안을 한중수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양국이 상이한 체제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한중수교의 체결이 그간 겪어온 북한 문제의 해소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과 중국이 마주한 외교안보 정세는 북한 요인과 일본의 부상 외에 수교과정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한-대만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먼저 대만과의 국교 문제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과 수교할 때 상대 국가는 관례적으로 대만과 단교를 해야만 했다. 1972년 9월 중일수교 당시 일본은 정식 서명 전, 대만에 자민당 부총재를 정부특사로 파견하여 중일수교에 관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으며, 1972년 2월 미중수교 당시 미국 또한 주(駐)대만 미국대사가 대만 총통을 접견하여 미중 간 외교관계 수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교 조치에 대만은 일본에 일본 선박

에 대한 입항 제한, 기계류 수입 중지 등 보복조치를 실시했으며, 미국에는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일대좌절이며, 세계 각 지역의 자유 민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이상옥 2002, 221-222).

한국 또한 중국과 수교에 앞서 직면한 대만과의 단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駐)한국대만대사관의 재산 처분 등 한국과 대만이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은 한중수교 체결 당일, 한국과의 단교를 선언하였다(이상옥 2002, 231). 1992년 9월호의 『한국논단』에 게재된 “중국환상곡” 특집에서는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대만과 북한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한중 수교의 정당성을 장기적으로 설득한 것과 달리 한국은 외교가 아닌 단순한 외교행위로 일관했다는 점과 두 개의 조선이 있듯 두 개의 중국이 국제정치상의 상식이며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국논단』 1992/09, 76-77). 이와 함께 대만과의 흑자교역이 한중수교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대일 무역역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했다(『한국논단』 1992/09, 83-84).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대만과의 의리와 우정을 포기할 만큼 중국과의 수교로부터 그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환상곡”이라는 특집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한중수교가 마냥 기뻐할 만한 사건이 아니며 한국이 갖는 희망과 기대가 단지 ‘환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92년 8월 25일에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삽화 <미주알 씨>(『한겨레신문』 1992/08/25)는 한국 주재 대만대사관의 처리 문제를 두고, 대만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섭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賀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명동 중화민국(대만) 대사관에 있었던 대만국기의 마지막 하기식에 참여, 눈물을 흘렸다.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한국에 일방적으로 단교를 당한 대만의 고난과 자신이 한국 땅에서 겪는 차별대우가 한꺼번에 서러움으로 복받쳐 왔다”(『월간중앙』 1992/10, 337-338)라는 사실에는 당시의 한중수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림 1> 한중 수교 당시 반한감정을 표출하는 재(在)한국 대만인



· 『한국논단』(1992/09)

<그림 2> 한국 주재 대만대사관 처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삽화



· 『한겨레신문』(1992/08/25)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던 한중수교가 북방외교 최대의 성과였다든지 선진국 수준의 외교관계를 구축했다는 등의 지나친 축하 분위기는 당대의 시대상을 충분히 고찰해 보지 않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만과의 단교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수교 당시 체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人士) 및 기관에 대한 불만, 혹은 당시 정부에 대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사회적 불만을 덮고자 하는 정부의 프레임워크로 인식하는 흐름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중수교는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실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한중수교의 와중에서 이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있어 국민들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부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이다. 선경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중수교라는 역사적 사건에 필적하고 있는 것일까. (중략) 한중수교를 염두에

뒤가며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결정되었다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유감일 수밖에 없다. 즉, 수교발표 며칠 전에 이동통신 사업자를 결정함으로써 정부와 선정에 쏠릴 비난여론을 한중수교 분위기로 묻으려 했다는 얘기다.”(『동아일보』 1992/08/25)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선정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수교라는 역사적 사건보다 국민들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관련 사안에 더욱 관심을 쏟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1992년 8월 23일에 실린 『경향신문』의 삽화 <청개구리>와 8월 24일에 실린 『동아일보』의 삽화 <나대로 선생>(『경향신문』 1992/08/23; 『동아일보』 1992/08/24)에는 한중수교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간의 관계를 보는 대중들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1992년 8월 23일 『경향신문』의 삽화 <청개구리>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를 두고 ‘移動’이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2년 8월 24일 『동아일보』의 삽화 <나대로 선생>에서도 선정에 대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먹은 존재”로 인식하는 대중들의 인식이 담겨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은 뭐 없나”라는 질문에 TV에서 한중수교 장면이 나타나고 “북경오리 시켜드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대중들에게 한중수교가 별다른 의미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중수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중수교에 대한 정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와 관련된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중들은 한중수교보다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방증한다.

당시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한중수교가 체결되기 사흘 전인 8월 20일에 선정그룹 선정을 발표했다. 체신부의 선정그룹 사업자 선정 발표 후 민주당과 국민당을 포함한 야권을 비롯하여 당시 대중들은 정경유착 등을 구호로 내세워 이를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이는 결국 야당에 의해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어졌다(『조선일보』 1992/08/23). 당시 야당과 대중의 반발은 선정그룹의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3>을 통해 정경유착 및 대통령 친인척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대중의 불만이 한중수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 혹은 기대감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한중 수교와 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 삽화



▪ 『경향신문』(1992/08/23)

<그림 4> 한중 수교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깊지 않음을 풍자한 삽화



▪ 『동아일보』(1992/08/24)

더불어 1992년 10월 22일 『매일경제』의 “中國 全人大 새얼굴 부상: 財界, 대륙人脈잡기 부산” 제하 기사가 “鮮京그룹의 경우 韓中수교에 李順石 (주)鮮京 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中國 고위층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다. 李 사장은 이번 수교에서 李先念 前 국가주석의 사위인 劉亞洲 라인을 우리 정부에 연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李 사장은 朱鎔基 부총리에서부터 주요 省·시장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崔鍾賢 회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中國을 방문, 田紀雲 부총리, 鄭鴻業 CCPIT 회장, 黃菊 上海시장 등을 만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해 놓았다”(『매일경제』 1992/10/22)고 적시한

바와 같이, 선경그룹이 한중수교의 비공식 채널이자 한국 정부의 막후로써 수교 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 여론은 이러한 행위마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춘천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중국 해군 어뢰정 표류 사건 이후 한중 간의 공식적이며 지속적인 접촉 채널은 양국 간 무역대표부의 상호 개설을 통해 재개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경그룹의 이순석 사장과 중국 부총리 겸 남조선영도소조의 조장이었던 텐지원 간에 면담은 무역대표부 개설의 첫 단추였다(윤해중 2012, 90). 뿐만 아니라 선경그룹은 1989년 12월 중국국제우호연락회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다양한 비공식접촉을 주도하기도 했다(이상옥 2002, 123). 당시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중국의 고위층과 유력 인사의 자제들과 전직 외교관 그리고 군 출신, 문화인들로 구성되어 국제 우호 친선의 증진, 특히 미수교 국가들과의 접촉과 관계 증진을 담당해 온 단체였다(이상옥 2002, 124). 1996년 8월 26일에 보도된 “청와대 - 북방 외교 파일: 북경이 선택한 메신저” 제하의 『한국일보』 기사가 담고 있듯이, 당시 한중관계 증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선경그룹이 전담하고 있던 것이다(『한국일보』 1996/08/26). 이를 통해 볼 때, 선경그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중수교 당시 양국 간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배경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한중수교 협상과정에서 대통령이 친인척관계를 동원하여 한중 간의 메신저 역할을 부여한 것은 한중수교가 단지 양국 간의 합의로만 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만 및 북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철두철미하게 기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²⁾ 최측근을 통한 기밀 및 보안 유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론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한중수교가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논란의 중심에 선 선경그룹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다.

한중수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비단 대만과의 단교 문제 및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한중수교를 통해 청사진을 그리고자 했던 한국

2) 당시 한중수교 프로젝트는 ‘동해’라는 수교협상 코드네임이 붙을 정도로 기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균중국연구소 2017b, 10).

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시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월간지인 『한국논단』의 1992년 9월호에는 중국이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수교 공동선언’ 제5조³⁾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의 통일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조의 사실을 게재하며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국과의 수교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보도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한중수교 공동선언’의 제2조⁴⁾에는 상호 간의 불가침과 내정 불간섭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위의 사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조선’ 담론과 관련하여서도, 한반도는 이미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동년 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건을 통해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한중수교 체결 직후 북한 요인과 관련한 당대의 인식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던 것이다.

한중수교 및 이를 추진한 노태우 정부에 관한 비판적 인식은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된다. 1992년 8월 24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韓中修交와 臺灣斷交” 제하 사실은 “中國의 韓國戰 참전으로 인해 우리의 국민들이 당한 고통과 희생을 잊을 수 없다. 중국은 이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中國은 여전히 北韓의 맹방이며 韓中수교 이후에도 北韓과의 우의를 더욱 다지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중략) 中國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고 이에 반해 韓國은 한쪽을 버리면서도 中國에 대해 무엇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동아일보』 1992/08/24)는 문장을 통해 한국이 한중수교 체결을 위해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반면,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짚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적의

3) ‘한중수교 공동선언’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성균중국연구소 2017a, 242).

4) ‘한중수교 공동선언’ 제2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성균중국연구소 2017, 242).

기저에는 한중수교 체결 당시 양국 간 수교라는 목표에 집중한 채, 한국 전쟁이라는 공통의 사건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흐르고 있다.

나아가 “韓中수교와 過去정리” 제하 8월 25일 『동아일보』 칼럼의 “보안 속에 추진된 양국정부 간 수교협상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간 歷史가 있기 때문이다. 中共人民軍의 韓國戰 개입과 이로 인한 한민족의 고통이 바로 그것. 吳建民 中國외교부대변인은 24일 수교 서명식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과거사에 대해 韓國에 사과했느냐고 묻자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동아일보』 1992/08/25)는 내용이나 “6·25와 駐韓中國대사의 발언” 제하 1992년 10월 11일 사설의 “韓國과 中國정부는 中國의용군의 韓國戰 참전에 대해 사과표시는 물론 유감의 뜻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中國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張庭延 駐韓中國대사는 韓國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이 같은 中國 정부의 태도를 또 한 차례 확인했다. (중략) 張대사는 中國정부는 韓中수교과정에서 6·25 참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감표명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92/10/11)는 문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전쟁이라는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는 한중 간의 수교는 비단 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제3자가 개입된 구도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당대의 사회 인식은 분단의 고착화, 상호 간 비호혜적이며 불균형적인 수교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 공동선언’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 체결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련 인식은 평화통일의 조기정착이라는 한국 정부의 목표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략)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한중수교 공동선언’ 제2조에만 천착하여 이를 단편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대의 여론이 정치적 사안과 유사하게 경제적 사안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제적 사안과 관

련하여 ‘경제영토의 확장’, ‘12억 중국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라는 프레임이 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1992년 8월 24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韓中수교와 兩國경제” 제하의 사설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韓中 간의 보완적 관계 확대가 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87년 17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간의 교역이 91년에는 60억 달러에 육박했고, 금년에는 1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더구나 아직까지도 中低級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산업들에 중국 12억 인구는 실로 엄청난 시장임에 틀림없으며, 이들의 경제성장이 매년 10%를 초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輸入需要는 우리의 對中輸出 확대의 전망을 매우 밝게 해주고 있다.”(『동아일보』 1992/08/24)면서, 한중수교가 창출할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사설의 말미에 “韓中수교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신선한 충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中國式 사회주의 경제발전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중국의 사회주의경제체제 간의 지향점에 괴리가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당시 한중수교의 경제적 사안에 대해 시장의 확장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중론은 다소 부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기도 했다. “한중수교의 경제적 파장은 단순히 두 나라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우선 한국과 대만의 경제관계가 기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문장이 실린 1992년 8월 26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韓中 臺灣의 경제補完관계” 제하의 사설은 “지난 89년까지 14건에 1천 3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 6월 말까지 2백 72건 2억 3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자로 이미 실패한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동아일보』 1992/08/26). 이외에도 8월 31일에 게재된 사설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걱정은 이제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보다 커질 전망이다. (중략) 그 원인은 분명하다. 우리 업체끼리의 경쟁격화 방지가 첫째이고, 다음은 국내에 껌데기 산업만 남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수교를 이제 이 제도까지 바꿔

원하는 업체의 대중 진출을 더 허용할 방침이다. (중략) 기업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이전 기업 중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서서히 그 이점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동아일보』 1992/08/31) 면서, 기업의 중국(해외)진출과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붕괴를 우려하였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1992년 8월 22일 『매일경제』에 실린 <공생원> 삽화는 한중수교로부터 야기된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한중수교가 문힐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뉘앙스를 담음으로써, 한중수교를 통해 정부가 생각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매일경제』 1992/08/22).

<그림 5> 한중수교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 의구심을 제기한 삽화



▪ 『매일경제』(1992/08/22)

이와 함께 대만과의 경제교역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수교로 인해 한국 경제가 일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인식 또한 일부 형성되고 있었다. 『한국논단』 9월호에 게재된 “투자전략, 經協의 전부 아니다” 제하의 글은 철강 및 금속, 전자, 자동차, 유화 등의 부문에서

92년 당시 대만과의 교역흑자를 보이고 있었지만, 단교로부터 각종 경제 협정의 폐지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있어 대만은 대일수입선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거점으로 활용되어 온 바, 대일 무역역조의 심화와 함께 무역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한국논단』 1992/09, 83-84). 이외에도 “대만 대사관 폐쇄의 상징적 의미는 다분히 정치적인데 치우친다. 그러나 그 이면의 경제적 변화 가능성도 실상 만만치 않다. (중략) 한국 자동차의 수입쿼터가 폐지되고 가전제품에 대한 덤핑혐의 조사가 착수되는 등 보복조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동아일보』 1992/08/26)는 기사를 통해 한중수교에 기인하는 대만과의 단교조치가 단지 정치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수교는 1992년 8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얻어진 결과로써 북방 외교의 중요목표를 달성한 성과였다. 이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42년간의 단절된 관계를 종식하는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에 대한 당대의 시대상은 대만 단교 문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수교의 막후역할을 했던 선경에 대한 인식, 북한 요인의 미해결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 등 다양한 층위에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즉,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로부터 외교의 저변 확대와 다각화를 실현하며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론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IV. 한중수교에 관한 인식의 맥락 분석

1. 긍정적 인식의 발현(發現)

한국전쟁 이후 한중 간의 공식적인 첫 접촉은 1983년 5월 5일에 춘천에

민항기가 불시착함으로써 이뤄졌다. 동년 2월 북한의 전투기가 귀순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치부되었다(<그림 6>). 그러나 해당 항공기가 중국 민항기의 납치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납치범 송환 문제로 한국정부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외교적 사안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은 정부의 당혹감과 다소 다르게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림 6> 한중 간 최초의 공식접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반영된 삽화



▪ 『경향신문』(1983/05/06)

<그림 7>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반영된 삽화



▪ 『동아일보』(1983/05/07)

1983년 5월 7일 『동아일보』의 삽화 <그림 7>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83/05/07). 먼저, 한국정부가 불시착한 민항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랍자들을 성의껏 대해줬다는 사실에 기반으로 “중공승객들 저러다가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우?”라는 표현을 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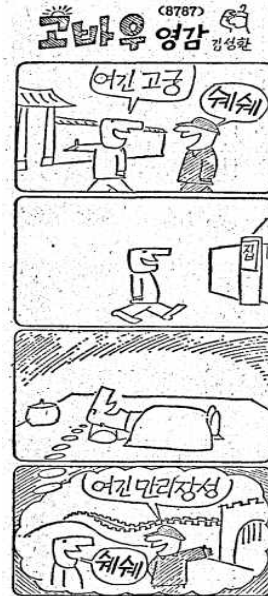
입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8>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반영된 삽화 I



▪ 『매일경제』(1983/05/09)

<그림 9>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반영된 삽화 II



▪ 『조선일보』(1983/05/11)

1983년 5월 9일 『매일경제』의 삽화와 5월 11일 『조선일보』의 삽화에도 한중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매일경제』 1983/05/09; 『조선일보』 1983/05/11). 먼저, <재치夫人>에는 “이러다가 중공기 피납노선이 관광노선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라는 표현이, <고바우 영감>에는 삽화의 주인공인 고바우 영감이 꿈속에서 만리장성을 방문하여 중국어로 “췌췌(謝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다. 이들 삽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민항기 불시착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부터 한중관계가 개선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다.

한중수교 이전의 한중 간의 예기치 못한 접촉은 2년 후인 1985년 3월 22일 중국 어뢰정이 한국 군산 앞바다에 표류하면서 다시 한번 발생했다. 중국 어뢰정이 한국에 표류한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나타난다. 1985년 3월 26일 『동아일보』에 실린 <나대로 선생> 삽화에는 “비온 뒤에 땅 굳는다지.”, “고맙소, 어뢰정 사건 뒤의 한-중공관계를 미리 짐쳐주시니...”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다(『동아일보』 1985/03/26). 당시 삽화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이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갈등 국면을 지속하였으나,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중국 어뢰정 표류 사건이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림 10>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삽화



▪ 『동아일보』(1985/03/26)

나아가 1985년 3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迅速하고 賢명한 處理” 제하 칼럼에 나타난 “中共군함들의 우리 領海 침범사건이 兩國 정부의 실

무적인 外交교섭을 통해 빠른 時日 内に 일단락되었다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략) 民航機 사건 때 두 나라가 合意한 ‘類似한 사건의 再發時에 발양할 共助협력정신’에 대한 다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兩國 間의 실무접촉을 통해 까다로운 外交 문제를 조기에 타결했다”(『경향신문』 1985/03/27)는 표현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까다로운 외교적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자료들에는 민항기 사건에 이어 중국 어뢰정 표류 사건을 한중 양국이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양국 間의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중수교 체결 이전에 발생한 양국 間의 사건들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이 한중수교 체결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인식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인식 전환의 동인(動因): 국내 정치적 요인

한중수교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난 원인은 시기상으로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정치력이 약화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국내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복잡다단하게 얽여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수교보다 2년 전에 체결된 한소수교 당시 3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한중수교 당시에도 ‘20억 달러의 대중국 차관 제공설’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야당을 포함한 대중들의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1992년 8월 21일 『동아일보』에 실린 “民主黨, ‘借款외교’國家체면 손상” 제하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民主黨의 朴智元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부의 韓中수교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韓中수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買收進上外交 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朴 수석대변인은 3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고 이루어진 韓蘇수교가 국내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주권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굴욕적인 수교를 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외교 행위를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하

루빨리 벗어나라고 촉구했다”(『동아일보』 1992/08/21). 이 기사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성명(聲明)’을 인용하여 “20억 대중국 차관제공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1992년 말 예정된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92년 8월 22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칼럼 또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臺北發 외신은 韓中修交가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의 대가로 韓國정부는 中國에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 이번에 盧 대통령이 결정한 韓中수교에 대해서 국민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이해나 목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정 간의 합의도 없었다고 한다. (중략) 韓中수교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의 논조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북방정책의 의미가 크게 상실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고, 韓蘇수교 때와 같은 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韓中수교는 이를 실제로 담당할 다음 정권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盧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위배되고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해도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변할지는 모르겠다”(『동아일보』 1992/08/22).

이러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의 첫 중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더욱 강화되었다. 1992년 9월 1일 『한겨레신문』의 “한중수교 그 이후 ⑤ 방중 정상회담 유대회복 길 터” 제하의 기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수교에 이은 자신의 중국 방문으로 6공 들어 중점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임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며, (중략) 그러나 자칫 업적 위주의 외교로 북방정책이 실리와 명분을 잃을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중략) 사실 한-중 사이의 갑작스런 수교와 이에 따른 한-대만 국교 단절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수교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미 수교과정에서 나온 20억 달러의 대중국 차관 제공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한겨레신문』 1992/09/01). 이 기사는 한중수교 이후 당시의 사회

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수교체결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의 합의, 대만과의 국교 단절문제, 성과 및 업적의 과시를 위한 임기 내의 무리한 추진, 나아가 20억 달러의 차관 제공에 기인한 비호혜적 관계의 수교 체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차관 제공설’과 ‘임기 내 무리한 추진’이다.

당시 한중 양국 사이에서는 차관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으나 ‘20억 달러의 대중국 차관 제공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1989년, 한국의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대표단이 라오닝(遼寧)을 방문했을 때, 한중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한국과 소련의 수교 당시 한국이 소련 측에 3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에게도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윤해중 2012, 60). 하지만 당시 한국 내에서는 소련에 차관을 제공한 것에 대해 ‘돈으로 수교를 샀다’는 표현이 횡행할 정도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측의 문의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대중국 차관 제공설’은 기정사실화되어 야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쏟아냈다.⁵⁾

사실과 관계없는 낭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된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측에서는 한중수교라는 외교적 성과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여당의 성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차관 제공설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한 것이다. 상기 『동아일보』의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교 이후의 실질적인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가 차기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가 임기를

5) ‘20억 달러의 대중국 차관 제공설’의 근원은 대만이었다. 한중 간 수교 합의 이후 한국이 대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자 대만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차관 제공설’을 퍼트리자 한국 언론이 이를 인용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한국 외무부가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 간 수교 문제와 관련하여 타이베이발 외신을 인용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중국에 20억 불 차관을 제공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이미 ‘차관 제공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이상욱 2002, 224).

불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나아가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인해 노태우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었던 북방외교의 추진 또한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한중수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한중 간의 관계는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관계회복이라는 거대한 국면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국면의 전환은 1970년대 초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테탕트 분위기와 함께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총화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완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조화를 이루며 나타난 결과물이었다. 한중수교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42년간의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건이자, 나아가 실리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를 바라보는 당대의 사회적 인식은 대만과의 단교 문제, 북한 요인의 해결 미비, 국내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수교의 막후역할을 했던 선경 그룹에 관한 부정적 시각, 나아가 ‘대중국 차관 제공설’ 등이 기정사실화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한중수교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경제영토의 확장과 12억 중국시장을 통해 자국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환영보다는 지적이나 비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교 이전에 양국 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소재로 한 다수의 삽화 및 사설에는 관련 사건에 대해 중국 내 한국의 이미지 개선이나 양국 간 관계 전환에 따른 기대감 등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 당시의 자료에는 상반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방외교 정책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었고, 특히 중국과의 수교는 한

국 외교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1980년대의 사회적 인식과 1992년 수교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수교 당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기저에는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업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중국 차관 제공설’이 허위라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분위기는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한소수교에 이은 굴욕적인 수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가 성과주의에 급급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논리 또한 확산되었다.

한중수교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수교 체결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회고록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 외교(사)적으로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수교가 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차기 대선을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면서 실제로는 당시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인해 한중 양국은 신뢰의 축적 과정을 생략한 채 급격하게 발전해 온 것이다. 즉 내재적으로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외형적 성장으로 인한 착시현상이 한중관계의 전반에 그대로 투영됨에 따라(이동률 2013, 16) 취약성이 증대되며 사안에 따라 관계가 요동치고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작금의 한중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지금부터라도 외형적 확대보다 신뢰 축적을 위한 기반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홍규 (2007). “제1, 2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북핵정책: 한국 정부에의 함의.” 『한반도평화포럼 발표자료집』. 한반도평화연구원.
- 박찬봉 (2008).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기능주의에서 제도주의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pp. 339-365.
- 성균국국연구소 (2017a).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7b). “한중수교 25주년 특집 인터뷰: 미래 한중관계, 속도보다 방향이다.” 『성균차이나브리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p. 10-18.
- 이상욱 (2002).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욱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 삶과 꿈.
- 윤비 (2012). “신화적 정의관의 붕괴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정치사상연구』. 제18집. 1호, pp. 185-212.
- 윤해중 (2012). 『한중수교 밀뿌리 이야기』. 이지출판.
- 정규섭 (2011).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p. 1-24.
- Luhmann, Niklas (1979). *Trust and Power: two works*. Newyork: Wiley.

2. 기타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보고.” 국토통일원.
- 문화공보부 (1988). 『민족자존과 통일변명을 위하여』. 문화공보부.
- 이동률 (2013). “한중관계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대안.”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
- 허문영. “한·중 수교 이후의 화교실태.” 『월간중앙』. 1992년 10월, pp. 336-345.
- 박광희. “투자전략, 경험의 전부 아니다.” 『한국논단』. 1992년 9월, pp. 81-87.
- 이기택. “중화사상 울타리 속의 외교행위.” 『한국논단』. 1992년 9월, pp. 74-80.
- “값비싼 비용.” 『동아일보』. 1992년 8월 25일.
- “남·북적 예비접촉 판문점 스케치.” 『경향신문』. 1984년 11월 20일.
- “노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일.” 『동아일보』. 1992년 8월 22일.
- “민주당 ‘차관외교’ 국가체면 손상.” 『동아일보』. 1992년 8월 21일.
- “선경 자진반납 모색.” 『조선일보』. 1992년 8월 23일.
- “신속하고 현명한 처리.” 『경향신문』. 1985년 3월 27일.
- “<외교열전> 한중수교 기틀 닦은 중국 어뢰정 사진.” 『연합뉴스』. 2012년 2월 27일.

- “6·25와 주한중국대사의 발언.” 『동아일보』. 1992년 10월 11일.
“제조업 공동화 방관할 것인가.” 『동아일보』. 1992년 8월 31일.
“중국 전인대 새얼굴 부상.” 『매일경제』. 1992년 10월 22일.
“청와대-북방외교과일: 북경이 선택한 메신저.” 『한국일보』. 1996년 8월 26일.
“한중 대만의 경제보완관계.” 『동아일보』. 1992년 8월 26일.
“한중수교 그 이후⑤ 방중 정상회담 유대회복 길 터.” 『한겨레신문』. 1992년 9월 1일.
“한중수교와 과거 정리.” 『동아일보』. 1992년 8월 25일.
“한중수교와 대만단교.” 『동아일보』.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와 양국경제.” 『매일경제』. 1992년 8월 24일.
<고바우 영감(삽화).> 『조선일보』. 1983년 5월 11일.
<공생원(삽화).> 『매일경제』. 1992년 8월 22일.
<나대로 선생(삽화).> 『동아일보』. 1983년 5월 7일; 1985년 3월 26일; 1992년 8월 24일.
<미주알 씨(삽화).> 『한겨레신문』. 1992년 8월 25일.
<재치夫人(삽화).> 『매일경제』. 1983년 5월 9일.
<청개구리(삽화).> 『경향신문』. 1983년 5월 6일; 1992년 8월 23일.

| 논문투고일 : 2017년 11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11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08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4 (2017)

**A Study on the Domestic Perception in the
Period of Normalization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hip:**

**The Analysis of the Editorials and Illustrations of the
Domestic Media in 1980-1990s**

Young-Tae Jang and Chul Yang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istorical memo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has been recorded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how the society of that time recognize at korea-china relations. The analysis data is illustrations, columns and the government's official statements of the times which occurred incid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ason why this study analyzes illustrations is that illustrations can supplement the deficient parts of language media such as statements and columns. And the reason for the comparison of the government's statements is that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 1992 is related to perception of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here is a constant claim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ino-korean needs to be renewed with the vulnerability of two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of society based on various data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trace the origin of 'illusions about Sino-korean relations'. By looking at some important depictions of the data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how the perception of society of that time is composed and

derives the implications.

- Key words: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Sino-Korean Relations, Domestic Perception, Illustrations, Editorials